2003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

- **(정책 내용) 국내 IT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기술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전략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핵심기술개발 추진)** 경기상황 또는 일시적인 출연금 수입 확대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미래 IT기술 수요에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바람직
    - ⇒ 차세대 IT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위험도가 높더라도 장기간 집중 지원하여 세계일류 기술 확보
  - **(연구개발 체계 구축)** IT기술간의 융합화, IT기술의 타기술에의 접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연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이 ETRI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학제간 협력을 통해 IT기술을 접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IT를 생활화할 수 있는 Digital Convergence 기술 개발에 중점
  -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현장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잠재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고 대학의 연구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
    - ⇒ 양적 기반 확충에서 탈피하여 질적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무적응력을 갖춘 글로벌 IT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 **(정책 평가) 학제간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방향은 바람직하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무모한 투자가 우려됨**
  - IT 산업이 현재 침체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근본적인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IT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 그러나,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위험도 높은 핵심기술 투자는 IT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추진해야 함

고흥수 연구원 pkhoca@hri.co.kr ☎ 3669-4014

최근 주요 정책 (2002. 8. 5 8. 19)

전자화폐 현황과 감독대응 방향	금융감독원 (8.6)	- 2002.6월말 현재 5개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가맹점은 모두 12,362개이며, 가입자수는 총 271만명, 월평균사용액은 3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4개(10여개 업체중)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업체의 가맹점은 모두 978개이며, 가입자수는 80만명, 월평균 사용액은 1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전자화폐 거래 소비자보호제도 확립을 위해 · 전자화폐 관련 법규의 제정을 추진하여 전자화폐 미사용잔액의 환급보장 및 전자화폐 발행자의 지급능력 확보 등 이용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 근거를 마련 -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의 최소화와 평형성을 도모하고 기술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의 손상을 가져오는 감독을 지양함
정보화기반구축 지원대상 9개지역 선정	중소기업청 (8.9)	- 진주시, 상평산업단지 등 전국의 9개 중소기업밀집지역이 정보화기반구축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됨 ·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밀집지역을 정보화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보화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 금년의 경우 당초 8개 지역 선정·지원을 목표로 전국 12개 지역의 지원신청을 접수, 심사 · 신청지역 중 정보화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9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화기반구축의 기술력과 여건을 갖춘 적정 사업자를 9월중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산업기술인력 아웃플레이스먼트 센터」 설립 추진	산업자원부 (8.13)	- 퇴직 기술인력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실시를 위해 「산업기술인력 아웃플레이스먼트 센터」 설립을 계획 중 · 기술인력의 경우 매년 약 10만 명의 이직인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특성에 맞춘 취업정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인구직 알선망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이직 및 퇴직 기술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기술자를 찾지 못해 매년 약 2만 여명의 기술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노동시장 내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 구조조정 등의 기업 사정으로 퇴직 또는 해고되는 기술인력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직업상담을 실시하며 개인별 능력과 경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재교육 훈련과 창업지원 등 가능한 모든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